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현구

독자권익위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가 첨단산업의 축을 서남권으로 확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기업 육성, 지역 소비 확대, 세수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AI·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다. 800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투자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힘이다.

대기업은 결코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소재·부품·장비, 물류, 설비, 유지보수, 연구개발, 인력공급 등 수많은 협력기업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이러한 공급망에 참여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기업이 들어와도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는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충분하다면 대

800조원 투자의 성공 조건

업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기술과 일자리, 소득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며 대기업의 투자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된다.

대만과 독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TSMC뿐 아니라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 역시 세계적 대기업 뒤에는 지역 곳곳의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경쟁력의 든든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결국 대기업은 나누이고 중소기업은 숲이다. 큰 나무 몇 그루만으로 건강한 숲이 만들어지지 않듯 지역경제도 강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제전략은 분명해야 한다. 대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기술개발과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 전환,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이 대기업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연금 매정제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할 것이 기업 친화적 문화다. 기업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전남광주를 선택한 기업들이 “정

말 오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업이 오히려 지역의 따뜻한 지원에 미안함을 느낄 정도의 신뢰와 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추가 투자와 협력기업 유치도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외부에서 기업에 다소 배타적인 지역이라는 인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기업은 특혜의 대상도, 불신의 대상도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린 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결정을 이끌어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투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할 때 지역의 미래는 현실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기업 몇 곳을 유치했느냐가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청년들이 얼마나 정착했는지, 지역 기업이 대기업 공급망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기업은 유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키워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800조 원의 투자를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질식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

이정미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
산업보건부 차장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있다. 바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이다.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저장탱크, 반응기 등은 외형상 평범한 작업공간처럼 보이지만,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작업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질식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예고가 없다’는 것이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작업자가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를 구하려던 동료까지 보호장비 없이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치명률은 산업재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반복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질식재해 고위험 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밀폐공간 작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맨홀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맨홀 작업 안전조치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정책은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관리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19일 전북과 인천에서는 맨홀 작업 중 작업자들이 동시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모두 구조되어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원인은 지금까지의 질식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밀폐공간 작업의 기본인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적정 보호구 착용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질식재해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원인이 명확하며, 예방방법 또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생략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와 발주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작업을 지시하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시작된다. 작업허가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제로 측정했는지,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감시인이 작업 전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지까지 직접 확인할 때 비로소 안전조치가 완성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도 유지관리, 맨홀 준설, 관로 조사와 같은 작업은 대부분 도급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작업업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한 안전관리 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기관과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은 계약으로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까지 위임할 수는 없다.

안전조치는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투자이다. 가스측정기 하나, 송풍기 한 대, 보호구 한 벌, 작업 전 10분의 안전 확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기본조치를 생략한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상실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질식재해는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여름에도 수많은 작업자가 맨홀과 하수관로,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주와 발주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질식재해의 시작이다.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한다”는 원칙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질식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때이다.

른 이해를 조정해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국립 의과대학 신설 문제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전남의 의료 취약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남 전체의 의료 발전’이라는 큰 목표보다 ‘어느 지역이 가져가느냐’는 논쟁이 앞서는 모습이다.

조직개편 논란도 통합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주와 전남이라는 두 행정 체계를 하나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능과 권한 조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출범 당시 강조했던 균형과 상생의 원칙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통합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는 출범 선인이나 조직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지역이 각자의 이해를 넘어 공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지금, 균형향 이전과 의대 문제, 조직개편은 통합의 방향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 갈등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지금 통합특별시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청사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의 기술’이다.

사설

고속철 KTX와 SRT 통합 반가운 이유

내달부터 고속철도 열차 KTX와 SRT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통합 고속철도 명칭은 ‘KTX’다.

정부는 향후 3년간 KTX 운영을 현재 SRT 수준으로 맞춰 평균 10% 인하하기로 해 이용객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코레일은 KTX와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 확대와 운행 횟수 증편 등을 통해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중 하루 1만5000석·주말 하루 1만7000석 이상으로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운행 횟수도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5월 20·일요일 광주송정~수서 구간 일부 열차에 ‘시범 중련열차’를 도입해 특정 시간대 좌석 공급량은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번 통합으로 호남선 좌석 수는 주중 하루 3742석, 주말 하루 4822석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서대전 경우 노선의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 8분에서 2시간 21분으로 약 47분 단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반복되던 ‘표 구하기 전쟁’ 등 호남선 이용객들의 고속철도 좌석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호남선 KTX 증편을 위해 ‘울인’한 지역 정치권 등의 공이 크다.

광주시와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을 수차례 찾아가 좌석 부족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KTX·SR 통합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정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관련 질의를 수차례하며 국토부와 광주시,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아침·밤 시간대 요금 인하와 10년 만의 호남선 증편, 지난 5월에는 호남선 일부 노선 중련열차 도입 등 소기의 성과를 이 끌어 냈다.

이번 통합이 좌석 공급량 증가, 요금·운영비용 절감, 공공성 및 서비스 개선 등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철도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폭염에 ‘히트플레이션’ 확산…대책 절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극단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히트플레이션은 ‘Heat(열)’와 ‘Inflation’이 결합한 신조어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폭염이 작황 부진과 공급 감소를 만들고, 이로 인해 농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로 고온에 취약한 신선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적상추 상품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1216원으로 6월(1030원)보다 18.1% 올랐고 청상추도 100g당 1202원으로 한 달 전 1030원보다 16.7% 상승했다.

또 시금치는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895원으로 6월(687원)보다 30.3% 뛰는 등 오름폭이 더 컸고 열무도 상품 1kg당 평균 소매가격은 3246원으로 한 달 전 2927원보다 10.9% 올랐다.

여기에는 폭염·가뭄·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양채소는 고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터진 생육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장기간도 짧은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냉방 수요 증가로 전력·에너지 비용이 늘어 생산·유통 비용에 반영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다행히 축산물 가격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3일 현재 이로 인한 가축 폐사만 49만3000여마리에 달해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히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식품기업들과 함께 8월 한 달간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냉동식품, 육류, 과자 등 가공식품 중심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폭염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추와 시금치 등 신선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산지 출하량 점검, 비축 물량 공급 등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